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재정부담 주체에 따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된다. 보조사업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뜻하며, 자체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순수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이다. 또한 모든 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결산은 이러한 사업별 예산과 함께 제공되고 있어 불용액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 정책사업의 분야와 부문에 근거한 사업들을 세부항목에 따라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회계연도(각 년도 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예산을 확정한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e-hojo)에 입력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입력한 세출 예산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및 복지예산 수준 등과 같은 지방재정통계를 홈페이지(재정고, lofin.mosapa.go.kr)를 통해 공개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시한 분야별 예산과 재정자립도와 같은 자료만 공개되고 있어 이용에 한계가 있다.

복지재정DB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과 지출,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생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추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 정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 사업으로 한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방교육재정으로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반영된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과 영유아복지사업은 복지 예산에 포함한다. 또한 주택 부문의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성격의 예산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문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식품의약 안전,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복지사업,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이 포함된다.

복지재정DB는 기본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결산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재정통계시스템(e-hojo)을 통하여 수집한 후 세출 기능별 분류에서 사회복지와 보건, 교육 분야 예·결산을 추출한다. 자료의 추출은 회계, 분야, 부문, 세부항목(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자원 자료를 포함한다. 이 자료들을 가공하여 일반지표를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된 일반지표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복지재정데이터베이스는 각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재정을 분야와 부문으로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에 제시된 분야·부문별 설정기준을 참조한다.

<표 2> 세출 예산 편성의 부문별 업무와 정책사업 유형화- 사회복지분야 예시

분야	부문	부문에 해당하는 업무	정책사업 예시
080	사회복지		
	081 기초 생활 보장	주민 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업무 기초생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기초보장지원 등 제외)지방공공근로사업(086 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082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증진 업무 사회복지 종합지원 정책 장애인·불우아동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복지회관운영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 지원정책 사회복지 사업평가 등 지역사회복지 노숙자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제외)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016 일반행정)	취약계층 아동 보호 장애인 복지 증진 부랑인보호및지원
	084 보육·가족 및 여성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윤락행위 방지,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개발, 아동·보육 관련 업무 여성복지(시설물설치 포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단체 지원 등 남녀차별금지, 여성인력 양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 운용, 보육료 지원 가족윤리교육, 가족계획, 가정의례 등 가족문화 모·부자 복지 등	보육·가족 지원 여성 복지 증진
	085 노인· 청소년	노령에 따른 제반 위험(소득상실, 사회생활 참여 저 하 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업무 청소년 육성·보호·활동지원을 위한 업무 노인 생활안정, 노인 의료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노인등 사회복지(시설물설치 포함) 노인복지관운영, 장묘사업(묘지공원 조성 포함) 등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용자, 기타 청소년 관련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자료: 안전행정부(2014),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11.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자가 입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입력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문제만 관리

하고 있다. e-호조시스템을 개발할 당시에는 재정전문가·행정전문가·IT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후관리는 IT업체에서 담당하면서 시스템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기입방식을 스크리닝하는 기제가 없다.

둘째,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예산 분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자율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대두되자 타 분야 사업도 복지사업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지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편차라고도 할 수 있고, 행정 편의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강원도 내 A군의 경우 건축 허가 및 신고처리, 경관 주택 건설 지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도시재생 네트워크사업,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사회복지 분야 주택 부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이는 070 환경보호 중 071 상하수도·수질, 140 국토 및 지역개발 중 142 지역 및 도시에 각각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내에서도 부문별 예산 편성에서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가장 빈번한 오류는 보훈부와 노동부,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부문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의 예산이 0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북구미시, 경북청송군, 경북예천군은 취약계층지원 예산이 0원으로 나타났고, 서울성동구와 대전유성구 등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동부 예산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장애인 인구의 비율이 일정 수준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예산 편성이 0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넷째,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복지재정 DB는 앞에서 살펴본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조정하는 작업은 기본적인 지침을 따르고 있으나 모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지는 않다. 분류상의 문제가 발생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내용을 확인하거나 예산서에 제시된 사업에 대한 개요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협조하지 않거나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복지재정DB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진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한다.

〈표 3〉 복지재정의 기능별 분류

기본분류	기능별 분류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
사회복지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보육·가족 및 여성 4. 노인·청소년 5. 노동 6. 보훈 7. 주택 1) 국민(공동, 주민)주택 등 2) 기타 8. 사회복지일반	1. 기초생활보장 2. 취약계층지원 3. 공적연금 4. 보육·가족 및 여성 5. 노인·청소년 6. 노동 7. 보훈 8. 주택 1) 국민임대출자 2) 국민임대용자 3) 저소득 및 근로자 전세자금 9. 사회복지일반
보 건	1. 보건의료 2. 식품의약품안전	1. 보건의료 2. 건강보험 3. 식품의약품안전
교 육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3. 평생직업교육 4. 교육일반

주: 진한 글씨는 중앙정부에만 있는 기능임.

자료: 고경환 외(2011), p. 18 재인용.

3.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자료원

1) 중앙정부 재정공시시스템(d-Brain system, www.openfiscaldata.go.kr)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 system)은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의 예산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7년 도입되었다. dBrain 시스템의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평가 등 재정 전반의 업무처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one-sto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dBrain 시스템은 지방재정(e-hojo), 지방교육재정(eduinfo) 등과 연계하여 국가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의 중심 시스템이기도 하다.

정부 3.0의 도입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가 확대·개편되었는데, 이 시스템의 공식명칭은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진은 OECD SOCX_KOR의 제출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공문을 통해 요청한다. 자료 요구시 다음과 같이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다.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분야: 정부 재정 전 분야(표 3 참고)
- 데이터추출: 회계연도-소관-회계-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지출목-지출세목-예산액(수정지출계획액)-예산현액(지출계획현액)-지출금액-지출순액
- 추출된 자료는 엑셀파일(excel file)로 제공됨.

(그림 3) 예시: 중앙재정(d-Brain시스템) 결산 자료 추출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출목	지출세목	세출예산액 /수정지출계획액	세출예산현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동	고용정책	대상별취업지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6,813,577,000	6,813,577,000	6,806,650,000	6,806,650,0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동	고용정책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기업 육성(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11,879,000,000	110,939,000,000	110,003,252,400	110,003,252,4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동	고용평등실현	장년희망찾기지원	사회공헌알자리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	2,110,000,000	1,892,670,000	1,892,670,000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동	노사정책	노사문화구축	지역노사민청협력활성화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157,500,000	2,157,500,000	2,157,500,000	2,157,5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523,954,000,000	2,523,954,000,000	2,523,954,000,000	2,523,954,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사업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412,034,000,000	388,743,000,000	358,567,149,000	358,567,149,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43,704,000,000	43,704,000,000	43,704,000,000	43,704,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자활장려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5,000,000,000	25,000,000,000	20,258,000,000	20,258,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48,095,000,000	48,095,000,000	48,095,000,000	48,095,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4,088,000,000	24,088,000,000	24,088,000,000	24,088,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327,000,000	2,327,000,000	2,327,000,000	2,327,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 지원 운영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797,000,000	797,000,000	797,000,000	797,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요보호아동보호육성	아동발달지원체계	아동발달지원체계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0,064,000,000	10,064,000,000	10,064,000,000	10,064,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지원	방과후활동지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30,594,898,000	130,594,898,000	130,594,898,000	130,594,898,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아동돌봄서비스지원 운영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62,550,000,000	62,550,000,000	62,550,000,000	62,550,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기초)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2,905,000,000	54,331,000,000	54,331,000,000	54,331,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수당(차상위 등)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2,689,000,000	51,453,000,000	51,453,000,000	51,453,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노숙인의사상자지원	노숙인등 지원	노숙인등 복지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7,065,000,000	27,065,000,000	27,049,018,000	27,049,018,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인구정책추진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0,000	4,950,000,000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	-	-	-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보육지원강화	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467,111,000,000	467,111,000,000	467,111,000,000	467,111,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보육지원강화	영유아보육료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329,228,000,000	3,329,228,000,000	3,329,228,000,000	3,329,228,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보육지원강화	영유아보육료지원	시간차등형보육서비스사업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800,000,000	3,045,000,000	3,015,634,000	3,015,634,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어	보육지원강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215,319,000,000	1,215,319,000,000	1,215,319,000,000	1,215,319,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지급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177,122,000,000	5,177,122,000,000	5,167,757,370,000	5,167,757,37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영주귀국 사할민한인	영주귀국 사할민한인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112,000,000	1,112,000,000	1,112,000,000	1,112,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5,171,000,000	5,171,000,000	5,171,000,000	5,171,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관련기관지원	노인단체 지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1,541,000,000	31,541,000,000	31,460,375,000	31,460,375,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143,269,000,000	143,269,000,000	143,269,000,000	143,269,000,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생활안정	노인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 운영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60,836,028,000	260,836,028,000	260,836,028,000	260,836,028,000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인·정소년	노인의료보장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920,000,000	920,000,000	918,912,000	918,912,000

자료: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 system)

지방재정관리시스템(e-Hojo system)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8년 개발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역시 예산 편성부터 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d-Brain system과 동일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편성, 지출품의, 지출결의, 투입된 자원대비 수지 예결산 성과 및 자금배정 등 투입된 자원의 흐름을 확인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정부부문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사업별 예산 등을 공개하기 위해서 재정고(지방재정의 창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http://lofin.moi.go.kr>).

재정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는 사업 단위 분석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있다. 자료 요구 시 다음과 같이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다.

- 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 분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기타
- 데이터 추출: 회계연도-소관(시·도·구·군)-회계구분-분야-부문-예산구분 -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통계목-재원(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 등으로 세분)-예산액계-지급누계액

(그림 4) 예시: e-Hojo 결산자료(통계목별조회)

회계구분	분야	부문	예산구분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재원	예산액		지출	
										계	지급누계액	계	지급누계액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7,445,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보조금	302,152,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302,152,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891,655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21,330,000		21,33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43,650,000		43,62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42,500,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31,946,000		31,893,2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31,946,000		31,893,20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보조금	22,185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22,185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493,797,000		490,662,82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493,797,000		490,662,820
일반회계	사회복지	보육·가족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49,406,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651,383,500		1,081,673,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발달지원체계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138,284,200		104,796,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발달지원체계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207,426,800		180,574,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58,984,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197,591,2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617,649,21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입양 후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862,8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입양 후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296,2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182,549,000		166,812,215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82,549,000		166,812,215
일반회계	사회복지	노년·청소년	당해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형별 청소년보호 지원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24,000,000		89,60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510,716,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긴급복지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87,266,000		85,222,9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036,430,000		498,20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980,000,000		976,065,24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176,838,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76,838,00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의사상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164,000,000		158,75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복지영과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향상 및 보편적 복지 증진	서울형 기초생활제도 도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550,542,530		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금	540,000		530,000
일반회계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당해예산	복지건강본부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자체재원	2,340,000		2,330,000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4. KIHASA 복지재정 DB를 통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연계

1)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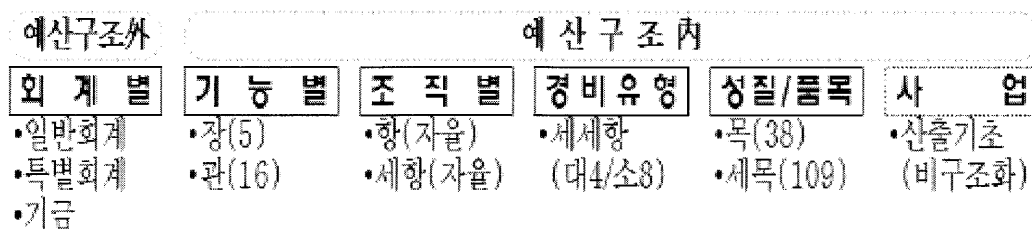
중앙정부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운영하였다. 품목별 예산 제도는 사업 단위 투입이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여 재정 상황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가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었다(2008년).

복지재정DB 역시 중앙정부는 사업별 예산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품목별 예산을 토대로 구축되었다(2004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변경에 따라 사업별 예산 체계로 전환되었다(2008년). 또한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 구조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2007년에 한해서 품목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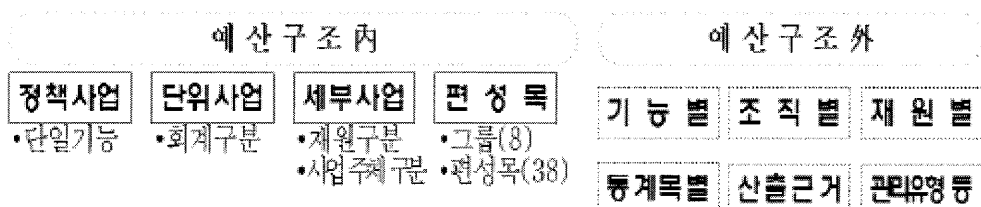
품목별 예산 구조는 조직별 예산에 항과 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질/품목이 제시되고, 사업별 예산은 사업(정책·단위·세부)별로 편성목이 포함되어 있어 2007년 품목별 예산과 2008년 사업별 예산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사업별 예산 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자료 재분류를 위해 재정 전문가, 행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복지재정DB는 200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별 예산 구조로 전환하였다.

[그림 5] 품목별 예산제도의 재정구조 체계



[그림 6] 사업별 예산제도 재정구조 체계



2) 중앙정부의 복지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연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따른다. 즉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각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세부사업유형별 비목별 매뉴얼』을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IMF)의 예산회계 지침을 준용하면서 한국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재정시스템(dBrain system)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시스템(e-hojo system)은 기본적으로 사업별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업의 기능별 분류는 기본적으로 IMF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분야와 부문을 정하고 있다. 즉 분야와 부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이다.

복지 분야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고보조사업임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 자료를 정책사업 항목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일한 항목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3가지(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분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 회계명으로 기입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재원은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로 구분되는데 중앙정부는 국비만 수록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된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앙정부의 재정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분야별.부문별 사업 구분을 통해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정책 영역별로 구분된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동일한 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어 매우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분야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보통교부세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타 분야 사업이 복지분야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나, 부적절하게 부문별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 연구진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기술통계를 분석한 후 이상점과 경향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과년도 자료와 비교하여 특이한 지방자치단체까지 검토를 마친 후 조정을 위한 1차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의 오류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결산 자료 및 담당 공무원 의견 등을 수렴한다.

그런 다음 재정전문가, 행정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자문회의를 통해 원자료와 1차 조정작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1차 조정작업에 대한 2차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자료를 최종 확정한다. 만약 1차 조정작업에

서 협의되지 않거나 판단이 유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2차 조정에 들어간다.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시하는 절차를 거부한다면 해당 절차는 종료된다.

〈부표 1〉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동향: 정책 영역 (2007~2012)

(단위: 십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앙정부 사회복지지출(계)		68,145	75,761	82,195	81,225	85,780	92,992
사회 복지	소계	49,263	55,946	74,763	73,635	78,225	85,082
	기초생활보장	6,576	7,264	7,990	7,418	7,528	7,978
	취약계층지원	903	932	2,409	1,569	1,345	1,312
	공적연금	17,173	19,670	23,868	26,141	28,212	31,609
	보육가족 및 여성	1,198	1,668	2,002	2,373	2,983	3,649
	노인·청소년	727	2,221	3,255	3,640	3,880	4,077
	노동	12,233	12,500	15,116	12,344	12,397	13,164
	보훈	3,368	3,570	4,114	4,341	3,882	4,058
	주택	-	-	15,356	15,324	17,442	18,644
	사회복지일반	452	614	653	485	556	591
	기타	6,633	7,507	-	-	-	-
보건 의료	소계	5,452	6,040	7,432	7,591	7,555	7,909
	보건의료	1,152	1,297	2,029	1,956	1,602	1,649
	건강보험	4,135	4,554	5,189	5,383	5,710	6,011
	식품의약품안전	165	189	214	252	243	249
주택 복지	소계	13,429	13,575	0	0	0	0
	국민임대출자	6,330	1,618	-	-	-	-
	국민임대용자	3,734	3,251	-	-	-	-
	저소득맞근로자전세자금	3,365	8,706	-	-	-	-

주: 2008년까지 주택복지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2009년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포함

〈부표 2〉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동향: 정책영역(2007~2012)

(단위: 십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초자치단체 (계)		14,739	18,438	22,101	23,276	24,786	28,204
사회 복지	소계	13,033	16,624	20,195	21,325	22,800	25,818
	기초생활보장	4,600	4,978	5,711	5,299	5,286	5,145
	취약계층	2,180	2,470	2,867	3,139	3,613	4,036
	보육가족 및 여성	3,101	3,904	4,507	5,452	6,396	8,528
	노인·청소년	3,022	5,012	5,963	6,141	6,551	7,137
	노동	41	133	923	987	621	537
	보훈	53	87	113	132	161	290
	주택	22	26	90	109	134	90
	사회복지일반	14	14	21	66	38	55
	보건 의료	소계	1,707	1,813	1,908	1,952	1,987
보건의료		1,546	1,721	1,796	1,830	1,869	2,283
식품의약품안전		161	92	112	122	118	102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12,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가공

참고문헌

고경환, 강지원, 정영애, 임완섭(2011). 정부의 사회복지재정DB구축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i.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2016. 1. 8)(<http://kosis.go.kr>)

통계청 e-나라지표(2016.1.8.)(<http://www.index.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5).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

행정안전부(2012). 지방재정연감.

OECD(2015), Poverty in old age.

Municipality expenditure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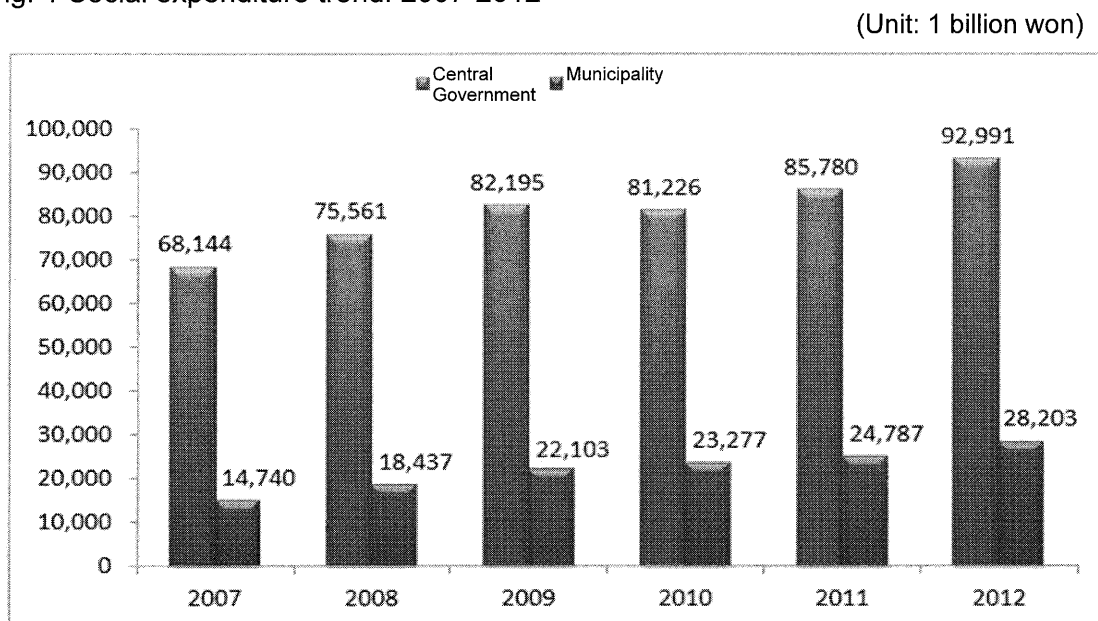
Kyeonghwan, G., Jiwon, K., and Youngae, J.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 Overview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 trend by policy areas

Kore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on an increasingly steep inclin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central government has increased over the last five years from about 68 trillion won in 2007 to about 92.9 trillion won in 2012 at an annual rate of 6.4%. Meanwhile, over the same period,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municipality has increased from 14.7 trillion won in 2007 to 28.2 trillion won in 2012 at an annual rate of 13.9%. Additionally, social welfare expenditure among municipalities is no more than 30% of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of 2012).

Fig. 1 Social expenditure trend: 2007-2012



Note: See Supplementary Tables 1 and 2 for more detailed data.

Sou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nance and Welfare Databases

This trend is attributable to an increase in the diversity of new social risks such as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What has driven the centr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over the last five

years the most are the elderly and youth sector and the childcare, family, and women sector. In fact, welfare expenditure in the elderly and youth sector has increased, from 0.7 trillion won in 2007 to 4.0 trillion won in 2012 at an annual rate of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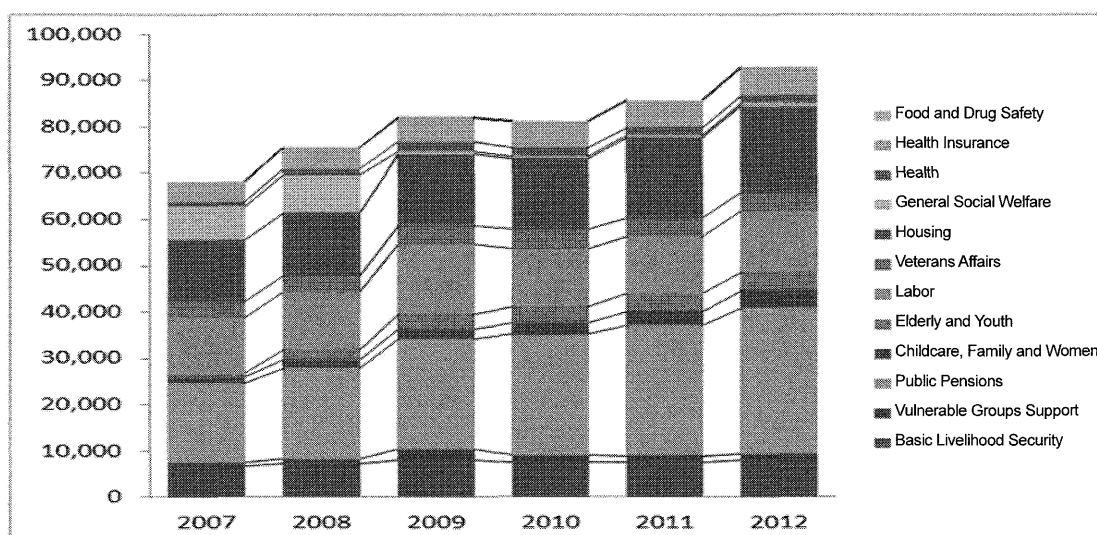
The percentage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is period (from 9.6% in 2007 to 11.4% in 2012; Statistics Korea's National Statistics Portal), and the increase in the central government's expenditure in social welfare is related to Korea's high elderly poverty rat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49.6%; OECD, 2015), which can be attributed to its immature social insurance programs and low elderly employment rate (39.6%,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In other words, Korea's elderly poverty rate rose while its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was still inadequate, and to cope with the resultant frequent social problems, Korea expanded its employment support and income support for the elderly.

In addition, Korea had a shocking level of total fertility rate of 1.076 per woman in 2005 (e-Country Index) and consequently endeavored to increase its fertility rate through various policy efforts such as promoting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expanding its child care service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s expenditure in the child care, family, and women sector has increased 3.1 trillion won in 2007 to 8.5 trillion won in 2012, at an annual rate of 22.4%.

Fig. 2 Central government social expenditure by policy area

(Unit: 1 billion won)



Note: Detailed data is shown in Attached Table 1.

Sou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nance and Welfare Databases

The municipalities have also seen a considerable level of increase in their welfare finance over the last five years.

Similar to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sectors related to new social risks, the child care sector and the elderly sector has been increasing at an annual rate of about 20%, which is high.

However, expenditure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policy sector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levant to traditional social risks, such as basic livelihood security, support of vulnerable groups, and health and medicine, has not increased much due to the 2007 budget being relatively lar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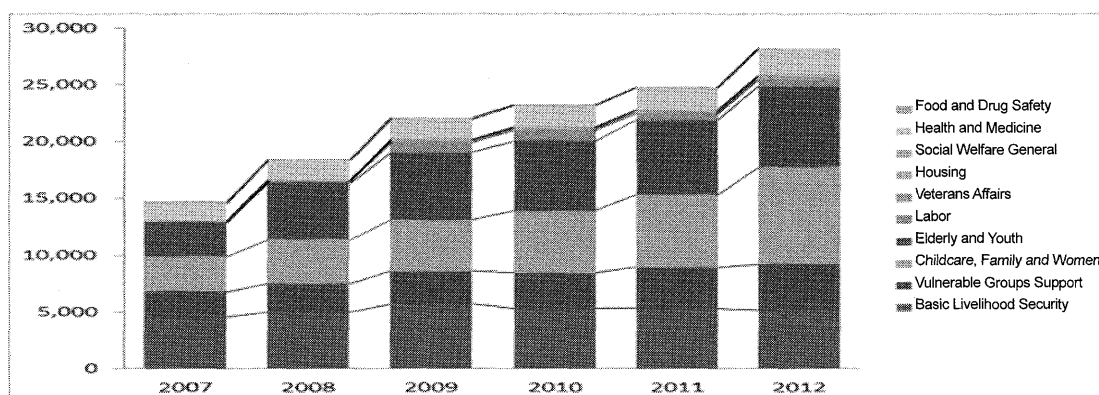
In additio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inancial expenditure among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labor sector has increased very sharply (at an annual rate of 67.3% over five years).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labor had been a sector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directly invested. However, faced with Korea's economic contraction due to business closures and unemployment following the crisis, local autonomous entities began to actively invest in the labor sector through measures such as creating government-funded job opportunities.

In addition, due to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s and shortage of houses for lease that resulted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inistry of Transportation, 2014), the housing situation among Koreans has become dire.

In particular, low-income households frequently cannot deal with skyrocketing key money deposits and consequently switch to monthly renting, and because housing costs make up a large portion of such households' income, there is an increased chance that they will enter into a downward spiral of housing poverty. To resolve such problems, local autonomous entities provided assistance to housing-poor households through public rentals and lease-based rentals; consequently, their expenditure has increased over the last five years at an annual rate of 32.5%.

Fig. 3 Municipality social expenditure by policy area

(Unit: 1 billion won)



Note: Detailed data is shown in Table 2.

Sou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inance and Welfare Database

2. Brief overview of local autonomous entity of finance system in Korea

The budget and accounts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divided into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based on a functional, project, or attribute basis according to the budgeting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The categories are then divided into areas, sectors, and policy projects, and the subcategories are further divided into project units, detailed projects, and items (Provincial Finance Act, Article 41). As of 2015,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budget consists of budgets for 13 areas and 52 sectors.

Table 1 Estimated expenditures by function

Area	Sector	Name	Area	Sector	Name	Area	Sector	Name
010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070		Environmental protection	110		Industry / SMEs
	011	Legislation and elections		071	Water and wastewater quality		111	Industry financial support
	013	Loc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072	Waste		112	Industry technical support
	014	Finance and monetary affairs		073	Atmospheric affairs		113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016	General administration		074	Nature		114	Industrial promotion and advancement
020		Public order and safety		075	Oceanic affairs		115	Energy and resource development

	023	Police affairs		076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116	General Industry / SMEs
	025	Disaster prevention and civil defense	080		Social welfare	120		Transport and traffic
	026	Fire protection		081	Basic livelihood security		121	Roads
050		Education		082	Vulnerable groups support		123	Urban railways
	051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084	Childcare, family and women		124	Maritime and port affairs
	052	Higher education		085	Elderly and youth		125	Aviation affairs and airports
	053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086	Labor		126	Public transport and logistics
060		Culture and tourism		087	Veterans affairs	140		Land and regional development
	061	Culture and arts		088	Housing		141	Water resources
	062	Tourism		089	General social welfare		142	Regions and cities
	063	Athletic affairs	090		Health		143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064	Cultural heritage		091	Health and medical affairs	150		Science and technology
	065	Culture and tourism general		092	Food and drug safety		151	Technology development
			100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affairs		152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support
				101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		153	General science and technology
				102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	160		Reserve funds
				103	Maritime affairs and fishing villages		161	Reserve funds

Note: The sections highlighted in bold type are the principal areas of financial welfare.
Sour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2015 Operating Rules for Local Autonomous Entity Budgeting and Guidelines for Fund Management Planning, Operating Rules for Local Autonomous Entity Budgeting (Directive No. 206), Attached Table 10

Policy projects are divided into primary projects and secondary projects depending on who bears the financial burden. Primary projects mean municipalities' own projects that are conducted using their own internal financial resources while secondary projects mean the supplementary projects conducted by the nation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In addition, budgets for all projects are allocated with the budgets being categorized into government expenses, *si-do* expenses, and *si-gun-gu* expenses. In addition, because accounting reports are provided together with budget data for each project, it is possible to know whether there is carry-over from the previous budget year and, if it exists, the amount.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prepares a budget to match its own circumstances and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ing guidelines prescrib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n other words, the local governments categorize their area-based and sector-based projects into project units, detailed projects, and items according to subcategory. Every year,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draws up a budget on a fiscal year (January 1 to December 31) basis and reports the budget to the Assembly. The local Assembly then decides on the budgets through review and voting. Afterwards, data about the approved budgets are entered into the integrated local finance system (e-Hojo) and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mpiles statistics about local finance, such as the budget scale and welfare budget level of each local autonomous entity, based on expenditure budget data entered by each *si-gun-gu* and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n releases them to the public via the Korean-language “Jaejung-go” website (lofin.mosapa.go.kr). However, the use of the website is limited because only data about sector-specific budgets and financial independence presented by each *si-gun-gu* and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Welfare finance databases are produced as basic data sources with which to determine the welfare budgets, expenditures, and performanc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o that end, welfare-related policy projects must first be extracted. As shown in the budgeting guidelines for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able 1), policy projects for social welfare are essentially limited to projects in the social welfare and health areas. In addition, education welfare and infant welfare projects for low-income households, which are not subsidized by local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are included in the welfare budget. With regard to the housing sector, a budget for the welfare of vulnerable groups is included.

Consequently, in terms of sector, welfare projects for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ector; the vulnerable groups support sector; the childcare, family, and women sector; the elderly and youth sector; the labor sector; the veterans affairs sector; the housing

sector; the general social welfare sector; the health and medicine sector; the food and drug safety sector; the early childhoo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ector; the higher education sector; and the lifelong vocational sector are included.

Welfare finance databases are essentially created based on each municipality's budgeting and accounting data. These are collected through the financial statistical system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e-Hojo), and budgeting and accounting data about the social welfare, health, and education areas are extracted based on function-based expenditure categorization. Data that is extracted include all data from each accounting, area, sector, subcategory (policy project, project unit, and detailed project), and financial resources type. This data is processed to create a common index, and the created common index is used to determine the welfare finance statuses of the municipalities.

In the creation of welfare finance databases, welfare finance, which was created on a project basis,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reas and sectors, and objective criteria is necessary for that process. For information about objective criteria, refer to the area- and sector-specific categorization criteria presented in Attached Table 11: Operating Criteria for Local Autonomous Entity Budgeting.(Table 2)

Table 2 Sector-specific work regarding expenditure budgeting and classification of policy projects - social welfare sector (example)

Area	Sector	Related work	Exemplary policy projects
080	Social welfare		
	081 Basic livelihood security	Work related to securing the minimum livelihood and basic welfare of residents Basic life benefits, education benefits, and medical benefits Rehabilitation support, basic welfare support Exception: Local public works projects (086 Labor)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ivelihood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082 Vulnerable groups support	Work related to improving welfare and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welfare comprehensive support policies Social welfare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Operating welfare centers Social welfare policies and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Assessment of social welfare projects Community welfare Homeless protection, homeless facilities protection, support for people injured or killed during relief efforts, and disaster relief Exception: Welfare centers operated by <i>eups</i> , <i>myeons</i> , and <i>dongs</i> (016 General administration)	Protection for children from vulnerable families Welfare impr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homeless
	084 Childcare, family and women	Planning and integration of policies for women,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victim prevention, prostitution prevention, gender equality and capacity development for women, children and childcare related work Women's welfare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Domestic violence, sexual assault counseling Support for women's organizations Promotion of women's rights such as prohibi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fostering a female workforce Establishment of childcare infrastructure, operation of childcare facilities, and support for childcare costs Family culture related work such as family ethics education, family planning, and family rituals; and welfare for single-parent families	Childcare/family support Female welfare enhancement
	085 Elderly and youth	Work related to responding to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old age (loss of income, diminished social participation, etc.) Work related to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fostering and protecting teenagers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the elderly, medical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support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Operating elderly welfare centers and funeral and cremation projects (including building cemeteries) Youth fostering, youth activities support, and youth protection Loan support for youth facilities and other youth related support	Elderly welfare improvement Youth protection and fostering

Sour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2015 Operating Criteria for Local Autonomous Entity Budgeting and Guidelines for Fund Management Planning, Attached Table 11.